

# 한미FTA 문제점과 1차 본협상

이 해 영 한신대학교 교수



## 1. 한미FTA의 문제점

한미 FTA협상이 선언되고 1차 협상이 종결되었  
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전망이 제시된 만큼 다시  
한 번 한미FTA의 반대근거를 다시 한 번 짚어 보  
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본다.

정부측 주장에 따르면 한미FTA는 '두마리 토끼'  
잡기이다. 즉 지금 한국 경제 성장이 정체되고, 고용  
이 안되니, 한미FTA라는 외부충격을 통해 경쟁력  
을 강화시켜 성장도 가속화하고, 고용도 촉진하고  
또 나아가 '사회양극화'도 해소하자는 것이 그 골자  
이다. 과연 가능한가. 한미FTA의 결과 굳이 한미 양  
측 어디 자료를 인용하지 않아도, 아주 상식적으로  
볼 때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감소한다. 왜냐  
하면 미국의 그것과 비교해 한국의 관세율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미FTA는 미국상품에 더  
많은 가격인하효과를 가져다 준다. 다른 조건이 불  
변이라면, 아마 한미FTA 체결 이후 어느 지점에서  
인가 한국의 대미흑자기조는 무너질 지도 모른다.

제조업은 그나마 믿는 구석이 있다. 특히 다른 것  
다 망가져도 자동차와 IT가 버텨주면 만사형통이라  
는 식이다. 과연 그러한가. 자동차는 이미 미국현지  
생산을 개시하였고, 알려진 것처럼 IT는 한국 수출  
경제의 주력중 주력이다. 자동차는 한국차의 대미  
수출관세가 고작 2.5%에 불과한 반면 미국차의 수

입관세 인하효과는 8%이다. 미국은 또한 우리나라  
세수의 20%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세제를  
뜯어 고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소형차가 한국  
에 상륙할 때 그 결과는 누구도 모른다. 한마디로  
자동차산업이 한미FTA 수혜업종이라 하지만 실상  
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다. IT를 보자. 우리 경제에  
서 IT가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하다. 그러나 IT는  
그 업종의 특성상 고용 및 생산 유발 효과가 매우  
낮다. 그래서 이른바 산업연관효과도 낮다. IT 수  
출이 늘어도 성장과 고용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말  
이다. 나아가 제조업부문 중 대미 비교열위에 있는  
부문에 대해 정부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 지도  
여전히 의문이다.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한미FTA의 타겟임은 잘  
알려져 있다. 경쟁력이 미국에 비해 절반에 불과하  
고, 선진국에 비해 서비스산업 비중이 아직 낮으니  
만큼 잠재력이 크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제조업에  
서 뒤져봐야 더 이상 나올게 없으니 이번에는 서비  
스산업이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래서 서  
비스 개방하여, 경쟁력 강화하자는 것이 한미FTA  
의 구호 아닌 구호이다. 물론 개방한다고 경쟁력 강  
화된다는 입증된 과학적 근거는 없다. 단지 그렇게  
주장될 뿐이다. 서비스산업 중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서비스와 교육, 의료가 중요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실생활 즉 소비자후  
생에 직결된 부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

부문은 개방하지 않겠다 밝힌 바 있다. 그렇다. 하지만 문제는 개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미 시장화가 진전되어 있다는 데에 있다. 한미FTA와 '따로 또 같이' 공공부문은 오래전부터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시장화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당장 이번에 처리할 필요는 없다. 특히 교육, 의료와 관련된 핵심쟁점인 영리법인화는 이미 경제자유구역법을 통해 진행중이고, 이것이 한미FTA의 투자조항과 결합될 때 그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다. 특히 1차 본협상 결과와 관련 이 부분은 아래에서 다시 짚기로 한다. 변호사, 의사, 회계사, 컨설팅, 설계사, 디자이너등이 바로 전문직 서비스이다. 달리 '비즈니스 서비스'로 분류하기도 한다. NAFTA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매년 일정쿼터를 정해 미국에서 영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간택된 일부가 한미FTA의 혜택을 입어 미국에서 성공신화를 만드는 동안, 예컨대 대다수 국내의 '생계형' 변호사는 이제 일자리전선에 떨쳐 나셔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자. 문화산업은 대표적인 FTA피해업종이다. 문광부가 꿈쳐두고 자기들만 보고 있는 한미FTA 문화산업 영향보고서에 따르면, 영화, 방송, 출판순으로 FTA에 의해 직격탄을 맞는다. 이미 영화는 스크린쿼터가 반토막났고, 이제 방송쿼터가 기다리고 있다. 출판시장은 한창 망가지고 있는 중이다.

미국은 세계최강의 서비스수출국이자, 서비스강국이다. 그런데 서비스산업은 한국의 대표적인 대미 적자산업이다. 거의 전부문에 걸쳐 대미 적자를 시현하고 있다. 그 적자폭은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쉽게 말해 경쟁력이 절반이니, 절반은 사망 아니면 중상이다. 미꾸라지 사는 논에 메기 한 마리를 풀어 놓으면 미꾸라지가 살기 위해 바둥대느라 맛이 좋아 진다고 한다. 그 유명한 고 이병철 삼성회장의 메기론이다. 그렇다. 나머지 절반은 미국서비스라는 메기로부터 살아남으려고 갖는 발버둥을 칠 것

이고, 혹 살아남으면 튼실한 그야말로 경쟁력을 갖춘 놈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서비스개방을 통한 경쟁력강화론의 실체이다. 한미FTA를 앞두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무슨 방안이 마련되었다는 말을 본인은 들어 본 바가 없다. 대책 없는 개방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가 중요한 한미FTA 관전포인트이다. 그런데 월드컵처럼 관전포인트 체크하면서 놀기에는 현실이 너무 엄중하지 않은가.

투자와 관련해 볼 때 설사 투자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포트폴리오투자인지, 직접투자(FDI)인지, 나아가 FDI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장설립형(Greenfield)인지 아니면 M&A인지에 따라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은 전혀 판이하다. 미국의 대미 투자중 거의 절반이 투기적 포트폴리오이며, 직접투자라 하더라도 절반이상이 M&A라고 할 때 그 영향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 IMF이후 2003년까지 외국인인 한국 증권시장에서 거둬들인 평가 차익이 1,000억 달러가 훨씬 넘는 현실에서 FTA의 결과 혹 미국의 대한 투자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한국경제에 약이 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북미FTA 10년 이후 캐나다에 투자된 미국의 직접투자의 약97%가 M&A자금이며, 미국기업이 매입한 캐나다 기업의 수가 캐나다기업이 매입한 미국기업의 수보다 4배가 많은 3000여개에 달한다는 사실은 이 위험성을 실증해 주고 있다. 투자에 관한한 론스타 사례가 모든 것을 말해 준다. 산자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우리가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목말라할 때, 바로 이 론스타를 유치하기 위해 '집중 노력'을 했다고 말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투기자본에 4조5천억을 안겨주기 위해 우리 정부가 나서서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말이다. 한미FTA 투자조항은 심지어 '사채', 투기자본에 대해서까지 내국민대우를 비롯한 온갖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

2003년 기준 대미 서비스무역 최대의 적자부문은 '로열티 등 사용료' 항목이다. 한마디로 지적재산권 부문이다. 2002년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WTO 부속협정가운데 하나인 '무역관련 지적권 협정(TRIPS)'을 완전 이행했을 경우 매년 -153억달러의 추가 지출이 예상되었다. 미국은 +190억달러의 수입이 예상되었다. 미국이 지적 재산권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 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은 특허출원이 지난 10년 폭증함에 따라 실로 고독한 단연 돋보이는 지적재산권 채무국이 된 것이다. 미국은 한미FTA를 통해 TRIPS도 모자라, 'TRIPS 플러스'를 요구한다. 한미 FTA 지적권조항은 말 그대로 손안대고 코푸는, 신자유주의 약탈경제의 산표본이다.

미국산 쌀이 국내산의 1/5가격이다. 식량자급률은 대부분 주요OECD국가가 100%를 넘는데 반해 우리는 26%에 불과하다. 심지어 미국은 막대한 농업보조금으로 인해 쌀값의 26%가 덤핑이다. 여기에 대해 우리 정부는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한국 농업은 가격경쟁으로 파탄나고, 농촌은 아파트 지어 절단나고, 농민은 전원이 자연사할 때까지 기다리는 상황이 초래된다. 현재의 조건에서 더 이상의 개방은 경제가 아니라 국가폭력일 뿐이다. 쌀은 FTA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지난 10년간 온갖 방법이 다 동원되었지만 해결된 문제는 없다. 정부는 이제 진정으로 솔직해 져야 한다. 지구상에는 여러 종류의 FTA가 있다. 그 중에는 미국형이 있고, 이와는 전혀 다른 EU형이 있고, 개도국형도 있다. 한미FTA는 미국형이다. 미국이 말하는 '높은 수준의' FTA 곧 서비스, 투자, 지적권등 풀옵션을 갖추어서 다시 말해 미국만을 위한 온갖 조항을 다 달고 등장한 것이라는 말이다. 우리는 그저 미국이 '높은 수준'이라 하니가 좋아서 따라가는 꼬락서니이다. 우리의 체질과 체급에 맞는

FTA, 세계경제 10위권이라면 이제 그런 FTA를 구상할 때도 되었다. 아니 이미 늦었는지 모른다.

## 2. 한미FTA 1차 본협상 평가

아래에서는 정부 발표문을 근거로 1차 협상의 결과를 평가해 보자. 협상이 이제 시작한 마당에 좀더 포괄적인 평가는 더 기다려 보아야 하겠지만, 현재 이 추세로 진행될 경우 그 결과는 결코 낙관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1차 본협상은 거시 통상전략의 부재와 미시협상전략의 부실이 빚어낸 재앙의 전주곡이라 할 만하다. 모름지기 협상은 과학, 준비한 만큼 승률과 승점이 올라가는 것이며 따라서 치밀하고 정교한 전략은 필수이다. 막연히 '자신감'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자신없는 측의 허장성세에 다름아니라는 말이다. 1차 본협상을 볼 때 지금까지 한국정부의 한미FTA추진 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이 협상과정에서 그대로 되풀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그 중 일부는 치명적인 오류에 해당된다.

**4대 현안 해결 약속** : 일체의 사회적 합의의 부재한 상태에서 이는 밀실협상으로 가는 첫걸음이었다. 더우가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열악한 협상지위에서 그나마 가장 유력한 협상카드를 스스로 포기한 최대의 패착이었다. 한미FTA는 '우리가 주도하여 성사한 협상'이라는 환상과 자기기만은 결국 우리의 양보를 정당화하는 구실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합의무시** : 이는 단지 규범적 이유에서가 아니라, 한국의 객관적 협상전력상의 열위를 상충하기 위해서는 국민대중의 지지가 필수적임에도 이를 스스로 팽개치는 오류를 범했음을 의미한다.

**협상문안의 비공개** : 정부측은 한미 양국이 비공개를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지만, 통상협정의 비준권이 의회에 있는 미국의 경우, 업계, 의회, 무역대표부의 강력한 공조시스템이 구

축되어 있기 때문에 미 업계를 비롯한 이해당사자는 협상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통상협정 체결 결과에 대한 투명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한국의 경우 비공개는 곧 한미 FTA협상이 오직 그들만의 협상이 됨을 의미한다. 그들만이 아는 협정은 결국 그들만을 위한 협정일 뿐이다.

**협상시기를 못 박은 점 :** 미국내에서 조차 TPA 연장론이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뒤늦게 시한에 구매받지 않겠다 하지만, 실은 아무런 일정 변경없이 그대로 강행되고 있다.

**협상분과구성을 미국의 요구대로 한 점 :** 미 USTR의 2월 2일자 대 의회 협상통보문과 한미FTA 17개 협상분과 구성은 사실상 동일하다. 이는 한미 FTA가 결국 미국의 요구대로 진행되게 만든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부실한 1차 협상문 :** 여론수렴 부실의 당연한 결과로서, 국내 여론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국제 협상의 초보적 상식조차도 무시한 당연한 결과이다. 정부측은 FTA 협상의 목표 내지 원칙으로 “이익의 균형”, “민감분야의 상호존중”를 열거하나 첫째, 소위 ‘이익의 균형’은 협상의 결과이어야 하는 것이지 목표나 원칙이 될 수는 없으며 그런 한에 있어 협상 목표는 당연히 ‘이익의 극대화’ 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이며 둘째, ‘상호존중’과 같은 매우 ‘우아’한 원칙을 말하고 있으나 전쟁을 방불케 하는 통상협상에서는 사실 말은 사실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결국 이 말은 정부가 과연 한미FTA를 통해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 지가 전혀 명료하지 않고 또 이는 불신의 원인이 된다.

최근 알려진 바로 ‘떡퇴(먹고 튀는)’ 자본의 대명사 론스타가 세금회피를 위해 자신의 로비스트를 동원 미 의회에 압력을 행사하면서 한미FTA의 ‘과세’ 조항을 문제 삼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그나마

론스타는 양심적(?)이다. 왜냐 하면 그래도 국내에 들어와서 사업장도 설립하고 고용도 창출하지 않았나. 현대 1차협상에서 한미간에 서비스공급을 위한 ‘현지 설립의무 면제’를 합의해 주었다. 이는 서비스산업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에 정면 배치된다. 그냥 현지에 앉아, 전화와 이메일로 장사하겠다는 말 아닌가. 어떤 의미에서 한미FTA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투자이다. 서비스교역의 절반 이상이 실은 외국인직접투자(FDI)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자는 서비스교역과 직결되어 있고, 지적 재산권도 투자의 일종으로 분류되므로 이 또한 투자의 문제이다. 어떤 의미에서 1차 본협상은 합의되지 않은 것보다 합의된 것이 더 중요하다. 그 중 투자조항이 가장 문제가 된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투자chapter의 구조 및 항목에는 대체로 의견이 접근”했다 한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일까. 이미 공개되어 있는 미국의 투자협정 표준안 즉 BIT 2004는 미국의 FTA 표준안의 투자장과 내용에 거의 차이가 없다. 그래서 1차본협상에서 한미 양국이 BIT 2004에 ‘의견이 접근’했다면 앞으로 인재(人災)는 불가피하다. 사채와 투기자본에도 내국인대우를 보장해 주고, 일체의 이행의무 부과 금지되고, 외투기업 최고경영자에 대한 국적조항은 사문화되고, 투자자는 정부를 상대로 제소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미국 측은 교육 및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제도의 변경과 이를 통한 시장개방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다. 이미 경제자유구역 내 학교와 병원에 영리법인이 시행중인 마당에 미국이 이에 관심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오히려 우리 일각에서 이를 마치 교육, 의료서비스 부문이 한미FTA에서 제외된 것처럼 보는 것이 더 문제이다. 나아가 위 발표문은 미국이 ‘영리법인화를 통하지 않는 시장개방’에는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부는 이에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 이미 WTO/DDA 협상에서 정부는 사립학교, 대학, 테스트서비스에 양허안을 제출하였고, 아울러 의료분야에서도 라식, 장기이식과 같은 '고급 의료서비스'는 FTA와 관련 개방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미국의 4대 선결조건 요구와 관련, 정부는 이미 작년 '적절한 시기에' 이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해 준비 있다. 미국 제약업자들은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화를 위한 약가 재조정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하면서, 마치 빗 독촉하듯이 정부를 다그치고 있다. 미국 제약업자들의 요구대로라면 우리 국민은 가만히 앉아서 약 50% 폭등된 가격을 지불하고 약을 사먹어야 한다. 이것이 FTA로 인한 이른바 소비자 후생 효과인가! 미국은 FTA에서 단 한번도 WTO부속 협정인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의 강화된 형태인 'TRIPS 플러스'를 놓친 적이 없다. 현재 사후 50년까지로 되어 있는 특허권 사용료 즉 로열티를 20년 더 내라는 말이다. 한국이 세계 최고의 로열티 지불국가이며, 한미 서비스교역의 최대 적자부문인 로열티를 20년 더 낸다고 어떤 추가성장효과가 있는가. 1차 협상에서 지재권 관련 '입장차이에도 불구하고 협정문의 통합에 합의' 했다고 하기에 묻는 말이다.

### 3. 맺는 말

최근 론스타는 자신들의 로비스트를 동원 미의회를 통한 한미 FTA 과세조항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미국 제약업자들은 한국정부의 4대 선결조건과 관련된 약속이행을 요구하며, 약가 재조정 중단을 요구하며 한미FTA 비토를 들먹이고 있고, 부시의 정치자금원 역할을 해 온 미국의 쇄고기업계는 광우병 쇄고기의 수입을 관철시키기 위해 온갖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처럼 한미FTA는 미국업계의 그동안의 밀린 '민원'을 총

정리하기 위한 '민원창구' 처럼 보인다. 지금 형국은 창구에 마치 한국 정부가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정부부처에 따라 문제를 지적하는 곳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을 '대통령의 뜻'으로 왜곡, 포장해서 일방주의적으로 밀어 부칠 때 언제까지 버틸지는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 국민합의는 고사하고 최소한의 절차적 투명성도 보장되지 않은 채 진행되는 한미FTA는 적어도 이런 방식으로 계속될 경우, 막대한 사회갈등비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정당성' 문제를 자초할 수도 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일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인정한다. 그렇다면 대안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러나 한미FTA에 반대한다는 것을 개방에 반대하는 즉 소위 '쇄국'과 동일시하는 것은 유치한 선동에 지나지 않으며, 나아가 건전한(prudential) 외국인 투자유치 조차 반대한다거나, 서비스산업의 이른바 '경쟁력강화'라든지, 미래 경제를 위한 '성장엔진' 모색에도 반대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견해와 입장과는 무관하다. 현재의 조건에서, 우리의 체급과 수준을 일체 고려하지 않은, 급진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무조건 개방에 대한 반대는 오히려 우리 수준에 맞는 FTA, '전략적 개방' 그리고 국민 다수 동의에 기반한 통상전략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농업을 제외하고도 FTA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조건이 맞지 않으면 그 FTA는 중단하면 되는 일이다. 스위스의 대미 무역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에도 미치지 않음에도 미국과의 FTA를 중단했다는 데에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지금과 같은 한탕주의식 FTA, 스스로 감당하지도 못할 '동시다발' FTA, 일부 통상테크노크라트가 독점하고 있는 비민주적이며 불투명한 FTA, 준비 안 된 FTA에 대해서 우리는 견해를 달리 하는 것이다.